

# “차별·폭력 없는 공동체 실현”…광주시, 인권마을 만든다

1억 2600만원 투입…10곳 모집·마을 1곳 당 최대 1500만원 지원

23일 5·18교육관서 설명회…주민 주도 인권 의제 발굴·해결 목표

광주시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마을 단위의 인권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2026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단순한 인권 교육과 인식을 넘어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광주시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026년 인권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마을공동체 10곳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1억2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선정된 마을에는 단계별로 500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된다.

인권마을 사업은 2013년 시작된 이래 2025년까지 총 182개 마을이 참여하며 풀뿌리 인권 문화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지난 13년간 투입된 예산만 17억8300만원에 달한다.

시는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을 ‘인권 인식’ 단계에서 ‘인권 실천’ 단계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지원 체계도 ‘시작(1~2년 차)’, ‘정착(3~4년 차)’, ‘확산(5년 차 이상)’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사업 진입 단계인 ‘시작 단계’ 마을은 500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학습 모임

과 기초 실태 조사에 집중하게 된다.

‘정착 단계’ 마을은 800만원 내외의 예산으로 마을 내 구체적인 인권 의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역량이 검증된 ‘확산 단계’ 마을은 1500만원 내외를 지원받아 심화된 의제 실현과 더불어 다른 마을에 노하우를 전수하는 멘토 역할 및 특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의 핵심 목표는 ‘소외와 차별 없는 인권마을’과 ‘평화와 연대: 폭력에 반대하는 인권마을’ 조성이다. 시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세계인권선언문조의 주제를 반영해 ‘불평등·차별 해소’와 ‘폭력 반대’를 2026년 인권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구 차평동 5·18교육관 대강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인권평화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소통·참여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이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마을 단위의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이웃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인권 공동체를 만들어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 여성단체 미래도약 출정식 12일 목포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열린 ‘전남 여성단체 미래도약 출정식’에서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고용 유입 줄고 구직자는 늘었다…광주·전남 고용 지표 ‘흔들’

광주,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6년째 감소…구직급여 신청자 3년째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의 부족과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광주 32만 1265명·전남 45만 8569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0.8%·1.0% 늘었다. 전국 피보험자 수는 1년 새 1.2%(18만 6436명) 증가한 1571만 639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 피보험자는 1년 새 2538명 늘었는데, 증가수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었다.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 증가분(9972명)을 크게 밑돌고, 세종(2826명)보다 적었다.

지역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수년째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지난해 광주는 1만 5000명 선, 전남은 2만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1~10월 기준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는 광주 1만 4871명·전남 1만 8851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8.8%(1436명)·13.6%(2973명) 줄었다. 광주는 6년 연속 신규 취득자가 줄고 있고, 전남은 2년 연속 감소세다.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줄어든 반면 구직급여 지급자는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3분기 구직급여 누적 지급자 수는 광주 7만 5515명·전남 8만 147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8%(1303명)·12.7%(9178명)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지급액은 광주는 3.5%

늘어난 2803억원, 전남은 14.5% 증가한 2983억원이었다. 1~3분기 기준 구직급여 신청자는 광주는 3년 연속, 전남은 2년 연속 늘었다.

윤정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구직급여 신청과 지급은 실질적인 취직 이뤄지지 않는 때도 있어 해당 시기의 실업 지표로 볼 수는 없지만, 비자발적 실직 동향을 알아볼 수 있는 통계”라며 “다만 구직급여 지급자·지급액의 증가는 사회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취업정보포털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광주 2838명·전남 6497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각각 18.7%(652명)·3.0%(200명) 줄었다. 광주 감소율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순천대, 목포대와 통합 여부 재투표 한다

통합 반대 학생들이 재투표 의견 수렴 설문서 찬성

목포대와 통합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순천대 학생들이 두 대학 통합을 위한 구성원 재투표에 찬성했다. 재투표 시기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순천대에 따르면 순천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 재학생 대상 재투표 의견수렴 설문조사에서 투표 참여자 630명중 348명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찬성률 55.2%를 기록했다.

앞서 순천대는 지난달 23일 치러진 구성원 통합 찬반 투표에서 재학생 3658명 중 2062명(60.18%)이 대학 통합에 반대했다. 순천대는 교원과 직원·조교, 학생 등 세 직역에서 찬성을 50% 이상을 대학 통합 찬성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교원과 직원·조교는 각각 56.12%(찬성 156표·반대 122표), 80.07%(찬성 245표·반대 61표)를 기록한 반면, 학생들은 찬성에 동의하지 않았다.

구성원 통합 동의 투표는 두 대학의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국립대 통폐합심사위원회(이하 심의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두 대학은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통합에 차질을 빚고 있었지만, 이날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재투표를 통한 학생들의 찬성 여부는 미지수지다.

순천대는 학생들의 재투표 찬성 여론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찬반 투표 일정을 잡아 진행할 방침으로 학생들의 두번째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심의가 오는 2월 중순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체계를 심의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 부족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의대 정원 확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국립대의대가 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순천대 재학생들의 통합 찬성 결과가 서둘러 도출되어야, 의대 정원 확정 전 두 대학 통합 승인이 가능하다.

순천대 학생들의 재투표 일정과는 별개로 심의 위는 오는 16일 제 11차 심사 통합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 전남도 “청년 부부에 결혼축하금 200만원 드립니다”

49세 이하면 신청 가능

전남도가 신혼부부에게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을 실시한다.

전남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연령이 49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혼인 후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일 경우 결혼비자 발급 1년 6개월 이내라면 결혼축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외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청년층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1만 8000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